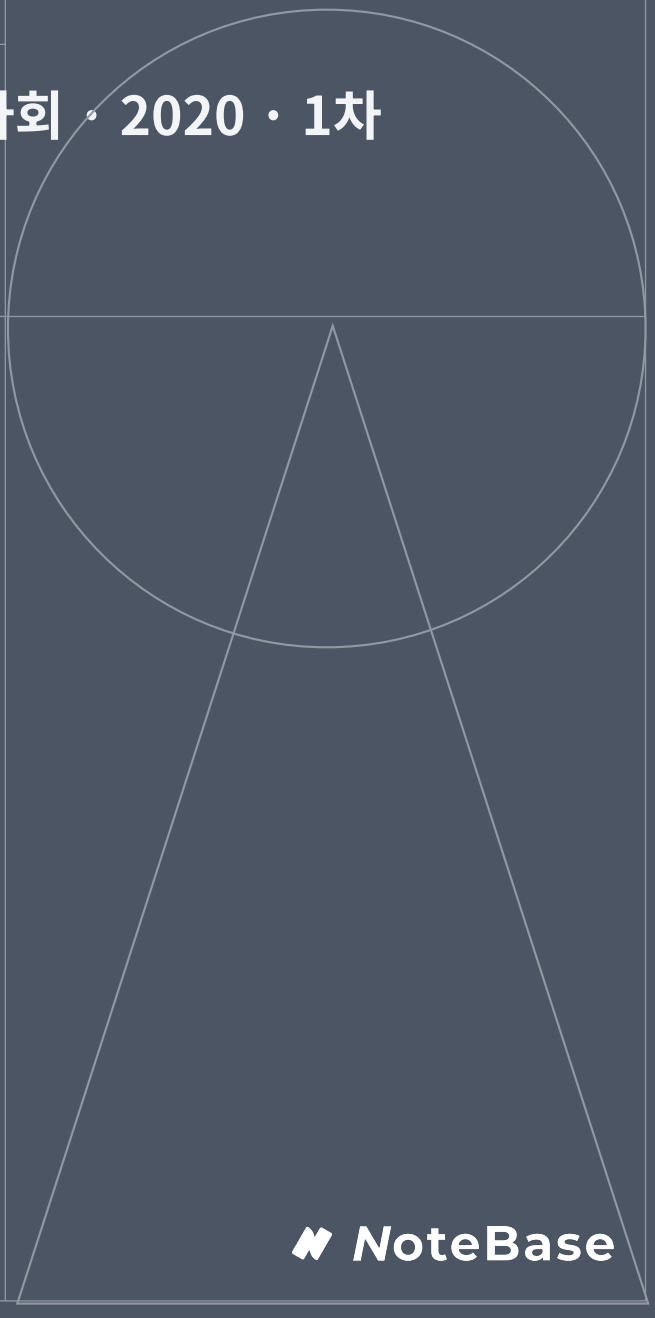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0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0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0 · 1차

문 1. 「민법」상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에서 감독의무자, 사용자, 동물 점유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책임의 주체와 면책 요건, 점유자가 면책될 때 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타인의 행위나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동물 또는 공작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법이 일정한 자에게 특별히 인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공작물은 건물처럼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뜻하고, 설치·보존의 하자는 그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핵심 구분

감독의무자, 사용자, 동물 점유자는 법이 정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 공작물 책임은 구조가 다르다.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공작물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② O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러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③ O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된다.

④ X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점유자는 면책되지만,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틀린 표현: "그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점유자의 면책을 피해자의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바꾼 선지이다. 공작물 책임에서는 점유자가 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하면 책임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먼저 책임 주체를 찾고, 이어서 면책 요건과 면책 뒤 책임을 지는 다른 주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공작물의 경우에는 '점유자 우선, 점유자가 주의를 다하면 소유자 책임'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작물 하자 책임은 점유자 우선, 점유자 면책 시 소유자 책임이다.

NoteBase

문 2. 「민법」상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1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가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공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민법상 유언의 요식성과 공정증서·비밀증서·녹음에 의한 유언의 법정 방식을 묻는다. 핵심은 방식별 증인의 수와 승인·서명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유언의 요식성 = 유언자가 원하는 내용만 밝혀서는 부족하고, 민법이 정한 방식까지 갖추어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1060조는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증인 2인이 참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낭독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녹음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의 방식은 각각 민법 제1067조와 제1069조가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요식행위이다.
② X —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1인이 아니라 증인 2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공증인의 필기낭독 뒤 유언자만이 아니라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틀린 표현: '증인 1인', '유언자가 그 정확성을 승인', '유언자와 공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올바른 표현: '증인 2인이 참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③ O — 비밀증서 유언은 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엄봉날인하여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고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④ O —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공증인이 관여한다는 점을 이용해 증인의 수와 승인·서명 주체를 바꾸어 놓았다. 공정증서라는 명칭만 보고 공증인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증인 2인'과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언 방식 문제에서는 방식마다 ① 누가 말하거나 작성하는지, ② 증인이 몇 명인지, ③ 누가 정확함을 승인하는지, ④ 누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지를 차례로 대조한다. 공정증서 유언에서 증인은 2인이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다.

암기 포인트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 참여 → 공증인 필기낭독 → 유언자·증인 승인 →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자료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국제 사회에도 도덕 및 윤리 규범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③ 국제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국가 간의 협력을 중시하며 집단 안보 체제를 강조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보편적 선과 국제 규범,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을 강조하므로 이상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핵심 개념

이상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도덕·윤리와 국제 규범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제법·국제기구·국가 간 협력을 통해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쟁으로 보고, 힘과 국가 이익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이상주의의 핵심어는 규범·협력·집단 안보이고, 현실주의의 핵심어는 힘·국가 이익·세력 균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의 특징이다.
② O — 국제 사회에도 보편적 도덕과 윤리 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의 특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이다. 이는 국가가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한다고 보는 현실주의의 설명이며, 이상주의는 국제 규범과 국가 간 협력을 중시한다.
④ O — 국가 간 협력과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침략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의 특징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은 국제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라 현실주의를 드러내는 결정적 표현이다. 제시문의 '보편적인 선', '국제 규범', '연합과 협력'은 모두 이상주의의 단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법·국제기구·도덕 규범·협력·집단 안보가 나오면 이상주의로, 힘·국가 이익·권력 경쟁·세력 균형이 나오면 현실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상주의는 규범과 협력, 현실주의는 힘과 국가 이익이다.

NoteBase

문 4. 선거구 제도의 유형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 선거구 제도	A	B
다수 대표제와 결합 여부	아니오	예
사표의 발생 정도	적음	많음

① A는 B보다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② A는 B보다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낮다.

③ B는 A보다 신진 인사의 정계 진출이 불리하다.

④ B는 A보다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표의 '다수 대표제와 결합 여부'와 '사표의 발생 정도'를 바탕으로 A와 B의 선거구 유형을 판별하고, 각 제도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표에서 A는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지 않고 사표가 적으며, B는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고 사표가 많다는 점을 확인한다.
2. 이에 따라 A는 중·대선거구제, B는 소선거구제에 해당한다고 판별한다.
3. 선거 비용, 후보자 난립, 신진 인사의 진출, 군소 정당의 유불리를 두 제도의 특징과 연결한다.

핵심 근거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보통 1명을 선출하고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므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여 사표가 비교적 적고, 신진 인사와 군소 정당의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표의 A는 중·대선거구제이고 B는 소선거구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표에서 A는 중·대선거구제, B는 소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가 넓어 선거 운동의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A는 B보다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A는 B보다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이다.
② X — A인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B인 소선거구제보다 높다. ‘A는 B보다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낮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A는 B보다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높다’이다.
③ O — 표에서 B는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고 사표가 많은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는 당선 가능성이 큰 기존 유력 인사와 거대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므로, A인 중·대선거구제보다 신진 인사의 정계 진출이 불리하다.
④ X — B인 소선거구제는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하여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군소 정당에 불리하다. ‘B는 A보다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B는 A보다 군소 정당에 불리하다’이다.

오답 포인트

표에서 A와 B를 반대로 판별하면 모든 선지의 방향이 뒤집힌다. 특히 ‘사표가 많고 다수 대표제와 결합한다’는 특징은 소선거구제인 B를 가리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다수 대표제·사표 많음’이면 소선거구제로 판별한다. 그다음 소선거구제는 선거 비용과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신진 인사와 군소 정당에는 불리하다고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소선거구제는 1명 선출·다수 대표제·사표 많음·거대 정당 유리이고,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명 선출·사표 적음·신진 인사와 군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NoteBase

문 5.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관계를 나타내는 제도와 권력분립에 따른 견제 수단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의원내각제적 요소 =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도록 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존재와 국회의 해임건의, 대통령의 임시회 집회 요구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연결되는 장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반면 탄핵소추는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을 통제하는 권력분립상의 견제 장치이며, 그 자체를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헌법 제47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및 제86조 제2항이 각 선지의 근거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국회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부합한다. 그러나 탄핵소추권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를 통제하는 권력분립상의 견제 수단이지,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제도는 아니다.
틀린 표현: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제시한 부분
올바른 표현: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권력분립에 따른 견제 장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행정부 구성원에 대하여 의회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이므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③ O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국회 집회를 요구할 권한을 인정한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관계를 보여 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④ O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를 별도로 두고 행정각부 통할 기능을 맡긴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탄핵소추권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므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단순한 상호 견제와 의회·행정부의 제도적 결합은 다르다. 이 문항에서는 탄핵소추를 권력분립상의 견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대통령의 임시회 집회 요구처럼 의회와 행정부가 연결되는 장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판단한다. 탄핵소추처럼 헌법·법률 위반에 책임을 묻는 제도는 권력분립상의 견제 장치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총리·해임건의·대통령의 임시회 요구는 내각제적 요소, 탄핵소추는 권력분립적 견제이다.

NoteBase

문 6. 다음의 표는 기본권 유형을 A~C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구분 \ 기본권	A	B	C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	아니오	예	예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	아니오	아니오	예

① A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유형으로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② B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③ C는 복지 국가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④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권리는 A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지를 기준으로 자유권·참정권·사회권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기본권의 성격을 청구권의 성격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선거나 공무담임 등을 통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의 구제 등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핵심 구분

표에서 A는 두 기준에 모두 '아니요'이므로 국가 이전에도 인정되는 방어적 권리인 자유권이다. B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참정권이다. C는 두 기준에 모두 '예'이므로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이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A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근대 시민혁명기에 확립된 가장 오래된 기본권 유형이며,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② X — B는 참정권이므로 국가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표현은 청구권의 성격이다. 올바른 표현은 'B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능동적 권리이다'이다.
③ O — C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복지 국가의 실현과 밀접하다.
④ O — A인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된 자유에만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 권리이다. 헌법 제37조 제1항도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힌다.

오답 포인트

②의 '수단적·절차적 권리'를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의 성격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참정권은 정치 참여를 위한 능동적 권리이고, 다른 기본권의 구제를 돕는 수단적·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면 사회권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국가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이면 참정권,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이면 자유권으로 판단한다. '기본권 보장의 수단·절차'라는 문구는 청구권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이며,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다.

NoteBase

문 7. 다음은 경쟁 형태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 시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table>
<tr><th colspan="2">시장 구분</th><th>공급자의 수</th></tr>
<tr><td colspan="2">A</td><td>다수</td></tr>
<tr><td rowspan="3">불완전 경쟁시장</td><td>B</td><td>다수</td></tr>
<tr><td>C</td><td>소수</td></tr>
<tr><td>D</td><td>하나</td></tr>
</table>

① A시장은 기업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허용된다.

② B시장은 상품의 성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상품 차별화가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독점력이 존재한다.

③ C시장의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담합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④ D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개별 기업의 생산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모의 비경제 실현에 유리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공급자의 수와 경쟁 정도를 바탕으로 완전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을 구분하고 각 시장의 특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다수의 기업이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시장이다. B는 다수의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C는 소수의 기업이 서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과점시장이다. D는 하나의 기업이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시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는 완전 경쟁시장으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② O — B는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상품 차별화가 있으므로 각 기업은 자기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 즉 독점력을 가진다.
③ O — C는 과점시장으로, 소수 기업이 상호 의존하며 경우에 따라 담합으로 가격이나 생산량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규모의 비경제 실현에 유리하다'이다. D와 같은 독점시장에서는 한 기업의 생산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유리하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실현에 유리하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독점기업의 큰 생산 규모라는 앞부분은 자연스럽지만, 그 효과를 '규모의 비경제'로 뒤집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고, 규모의 비경제는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급자 수로 다수·소수·하나를 구분한다. 다수인 경우 상품이 동질적이면 완전 경쟁, 차별화되어 있으면 독점적 경쟁으로 판단한다. 소수이면 과점, 하나이면 독점으로 판단한 뒤 진입·퇴출, 상품 차별화, 담합, 규모의 경제 여부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다수·동질은 완전 경쟁, 다수·차별은 독점적 경쟁, 소수는 과점, 하나는 독점이다. 큰 생산 규모와 평균 비용 하락은 규모의 경제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는 커피숍 개업을 위해 1,000만 원을 들여 커피숍 사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였다. 시장 조사에 따른 연간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 연간 예상 수입은 2억 5,000만 원으로 가정한다.)

(단위: 만 원)

구분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대출 이자	기타 경비
금액	10,000	5,000	3,000	1,000	1,000

① 커피숍 개업에 따른 경제적 이윤은 0원이다.

② 커피숍 개업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2억 원이다.

③ 시장 조사 비용 1,000만 원은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④ 커피숍 개업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4,000만 원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매몰비용을 구분하고 경제적 이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예상 수입: 2억 5,000만 원
연간 지출: 인건비 1억 원, 재료비 5,000만 원, 임차료 3,000만 원, 대출 이자 1,000만 원, 기타 경비 1,000만 원
포기하는 연봉: 4,000만 원
이미 지출한 시장 조사 비용: 1,000만 원

사용할 공식

경제적 이윤=총수입-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화폐를 지출하는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자기 자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기회비용이다.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시장 조사 비용은 현재의 개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하는 매몰비용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명시적 비용 = 1억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억 원이다.
2. 직장을 그만두면서 포기하는 연봉 4,000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다.
3. 경제적 이윤 = 2억 5,000만 원 - 2억 원 - 4,000만 원 = 1,000만 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경제적 이윤은 0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 틀린 표현인 '0원'은 '1,000만 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연간 지출액을 모두 합하면 2억 원이므로 개업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2억 원이다.
③ O. 시장 조사 비용 1,000만 원은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매몰비용이다.
④ O. 커피숍을 개업하면 기존 직장의 연봉 4,000만 원을 포기하므로 암묵적 비용은 4,000만 원이다.

오답 포인트

시장 조사 비용을 경제적 이윤 계산에 다시 포함하면 경제적 이윤을 0원으로 잘못 계산하게 된다. 이 비용은 이미 지출한 매몰비용이므로 현재의 개업 결정에서는 제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지출액을 명시적 비용으로 합산하고, 포기한 소득을 암묵적 비용으로 더한다.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분리한 뒤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뺀 값이며, 매몰비용은 현재의 의사결정에서 제외한다.

NoteBase

문 9.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판매 수입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기업의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

②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인상한 비율만큼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③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어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하하면 수요량이 적게 늘어나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판매 수입에 미치는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이며, 판매 수입은 $TR = P \times Q$이다.
탄력적 수요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고, 단위 탄력적 수요는 두 변화율의 크기가 같으며, 비탄력적 수요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 완전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므로, 가격과 판매량의 효과가 상쇄되어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인상한 비율만큼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이 그대로이므로 가격을 인상할 때 판매 수입은 가격 인상률만큼 증가한다.
③ O — 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 인상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크므로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④ O —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 인하율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더 작으므로 가격 인하의 효과가 더 커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를 '판매 수입도 변하지 않는다'로 혼동하게 만든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일정한 것은 수요량이며, 판매 수입은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TR = P \times Q$를 놓고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를 비교한다. 탄력적이면 수요량 효과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효과가 더 크며, 단위 탄력적이면 두 효과가 상쇄된다.

암기 포인트

가격 인상 시 탄력적이면 수입 감소, 비탄력적이면 수입 증가이다. 가격 인하 시에는 반대이며, 단위 탄력적이면 수입이 일정하다.

NoteBase

문 10.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②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③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④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낮아지며,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 통화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의 수단이 통화량·이자율·소비·투자에 미치는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대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대표 수단은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이다. 확대 재정정책인 세율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여 총수요를 늘린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이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 부담이 커져 통화량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자율은 상승하여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이다.
② O —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 하락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③ O — 세율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기업의 세후 투자 수익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므로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에 해당한다.
④ O —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 대금이 시중에 공급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져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재할인율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함정이다. 재할인율·지급준비율은 인하할 때, 공개시장 국공채는 매입할 때 통화량이 증가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정책 수단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판단한다. 통화량 증가라면 이자율 하락과 소비·투자 증가로, 통화량 감소라면 이자율 상승과 소비·투자 감소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경기 부양은 재할인율 인하·지급준비율 인하·국공채 매입이며, 경기 억제는 그 반대이다.

NoteBase

문 11.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② 외국으로 갈 경우의 경비 부담이 증가하여 해외여행이나 외국으로의 유학이 감소한다.

③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국산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④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수입으로 지출하는 외화에 비해 많아져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원/달러 환율 상승이 원화 가치, 외화 표시 채무, 해외 지출, 수출입 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달러 환율 상승은 1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졌다는 뜻으로,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외화로 지급할 금액의 원화 환산액과 수입품의 원화 가격은 상승하고, 국내 상품은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같은 달러 표시 외채를 갚더라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국내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② O — 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늘어 해외여행비와 유학비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므로 해외여행이나 유학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국산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이다. 실제로는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고 국산품의 상대 가격은 하락하므로 수입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O —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순외화 유입이 늘고, 그 외화가 원화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통화량과 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결론인 '수입 감소'만 맞게 제시하고 그 원인을 반대로 적었다. 환율 상승 때 수입품의 원화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며, 국산품은 수입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달러 환율 상승을 먼저 '달러 강세·원화 약세'로 바꿔 해석한다. 이어 달러로 지급하는 외채·수입·해외여행의 원화 부담은 증가하고,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과 수출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환율 상승은 원화 약세이므로 외채·수입·해외 지출의 원화 부담은 커지고, 수출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NoteBase

문 12. 조세는 세율 적용의 방식에 따라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례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반면, 누진세는 고소득층에 불리하다.

② 부가가치세, 주세 등이 비례세에 해당하고, 상속세, 증여세 등이 누진세에 해당한다.

③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④ 비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에 적용되는 반면, 누진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에 적용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비례세와 누진세를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다.
비례세는 동일 세율, 누진세는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세율 상승이 핵심 차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비에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상대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큰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② O — 이 문항의 교과서적 분류에서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은 비례세의 대표 사례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의 사례이다.
③ X —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부분이 두 개념을 서로 뒤바꾼 것이다. 올바르게는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④ O — 교과서적 분류에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에는 비례세율이 주로 적용되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는 소득·재산의 크기를 반영하는 누진세율이 주로 적용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비례세와 누진세의 세율 적용 방식을 정확히 바꾸어 놓았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 상승'은 누진세이고,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동일 세율'은 비례세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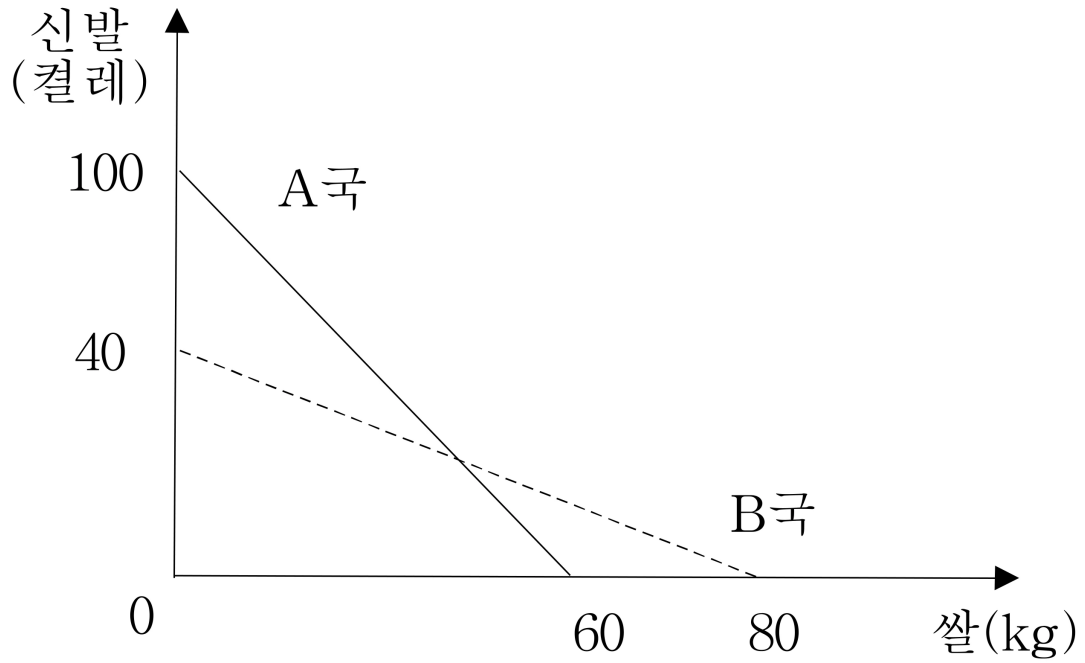
과세표준이 변할 때 세율이 그대로이면 비례세,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면 누진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례세는 같은 세율, 누진세는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그림은 신발과 쌀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를 분석하고 추론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며, 양국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한다.)



<보기>

㉠ 신발 1켤레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A국보다 크다.

㉡ 신발과 쌀의 교환 비율이 1 : 2이면, A국과 B국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A국은 쌀 생산에,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 A국과 B국은 절대 우위를 가지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도 동시에 가진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생산 가능 곡선의 절편으로 절대 우위를 비교하고, 한 재화를 1단위 더 생산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으로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A국은 신발만 생산하면 100켤레, 쌀만 생산하면 60kg을 생산한다. B국은 신발만 생산하면 40켤레, 쌀만 생산하면 80kg을 생산한다.
절대 우위는 같은 생산 요소로 더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가지며,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작은 국가가 가진다.

사용할 공식

신발 1켤레의 기회비용은 쌀 최대 생산량신발 최대 생산량이고, 쌀 1kg의 기회비용은 신발 최대 생산량쌀 최대 생산량이다.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므로 이 비율로 일정한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신발 1켤레의 기회비용은 A국이 60/100 = 0.6kg의 쌀, B국이 80/40 = 2kg의 쌀이다. 따라서 A국이 신발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2. 쌀 1kg의 기회비용은 A국이 100/60 = 5/3켤레의 신발, B국이 40/80 = 0.5켤레의 신발이다. 따라서 B국이 쌀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3. 신발의 최대 생산량은 A국이 더 많고 쌀의 최대 생산량은 B국이 더 많으므로 A국은 신발, B국은 쌀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4. 신발 1켤레와 쌀 2kg을 교환하면 교환비율이 B국의 신발 1켤레 기회비용과 같다. B국은 무역 전과 차이가 없어 이득을 얻지 못하므로 양국 모두가 이득을 얻는 교환비율이 아니다.

보기 판단

㉠ O. 신발 1켤레의 기회비용은 B국이 쌀 2kg, A국이 쌀 0.6kg이므로 B국이 더 크다.
㉡ X. 신발과 쌀의 교환비율이 1:2이면 B국은 국내 교환비율과 같아 무역 이득이 없다. 올바르게는 신발 1켤레의 교환대가가 쌀 0.6kg보다 크고 2kg보다 작을 때 양국 모두 이득을 얻는다.
㉢ X. 절대 우위의 재화가 서로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A국이 신발 생산에, B국이 쌀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 O. A국은 신발에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모두 가지고, B국은 쌀에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모두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은 틀리므로 ㉠㉡은 옳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② X. ㉡과 ㉢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③ X. ㉣은 옳지만 ㉢은 틀리므로 ㉢㉣은 옳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④ O. ㉠과 ㉣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에서는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교환비율이 놓여야 양국 모두 이득을 얻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교환비율 1:2는 B국의 기회비용과 정확히 같으므로 B국에는 이득이 없다. 또한 절편의 크기로 판단하는 절대 우위와 기회비용으로 판단하는 비교 우위를 혼동하면 ㉢을 옳다고 보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재화의 최대 생산량으로 절대 우위를 정하고, 두 절편의 비율로 재화별 기회비용을 계산해 비교 우위를 정한다. 무역 이득은 교환비율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 확인한다. 경계값과 같으면 한 나라는 이득을 얻지 못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 우위는 생산량,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다. 교환비율은 두 기회비용의 사이에 있어야 양국 모두 이득을 얻는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일부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방 법	
	(가)	(나)
장점	· 문맹자에게 적용 가능 · 심층적인 자료 수집 가능	· 다량의 자료 수집 가능 · 응답자 간의 비교 분석 용이
단점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 조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존재	· 문맹자에게 적용 불가능 · 응답자가 조사 내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 존재

① (가) 면접법
(나) 질문지법

② (가) 참여관찰법
(나) 실험법

③ (가) 면접법
(나) 실험법

④ (가) 참여관찰법
(나) 질문지법

정답 1, 4번

출제 포인트

자료 수집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근거로 각 방법을 식별하고, 하나의 특징 묶음에 둘 이상의 방법이 들어갈 수 있음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면접법은 조사자가 응답자와 대화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문맹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심층 자료를 얻기 쉽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
참여관찰법은 조사자가 연구 대상의 생활이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으로, 문맹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자료를 얻기 쉽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
질문지법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다수에게 배포하여 응답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대량 자료 수집과 응답자 간 비교에 유리하지만 문맹자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응답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실험법은 인위적으로 조건을 통제하고 독립 변인의 효과를 관찰하여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면접법의 특징과 일치하고, (나)는 질문지법의 특징과 일치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이다.
② X — (가)를 참여관찰법으로 본 것은 가능하지만, (나)를 실험법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나)는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응답자 간 비교가 쉬우며 문맹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질문지법이다. 틀린 표현 '(나) 실험법'은 '(나) 질문지법'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가)를 면접법으로 본 것은 가능하지만, (나)를 실험법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나)는 변인을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실험법이 아니라 표준화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으는 질문지법이다. 틀린 표현 '(나) 실험법'은 '(나) 질문지법'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가)의 특징은 참여관찰법에도 모두 해당하고, (나)는 질문지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가)의 '문맹자에게 적용 가능', '심층적인 자료 수집', '많은 시간과 비용', '조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은 면접법에만 해당하는 고유 특징이 아니라 참여관찰법에도 해당한다. (가)를 하나의 방법으로만 단정하면 1번 또는 4번 중 하나를 빠뜨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고유성이 강한 단서를 찾는다. '대량 수집·비교 용이·문맹자 적용 불가·질문 오해 가능'이 함께 제시되면 질문지법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특징은 여러 방법에 공통될 수 있으므로 각 후보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각각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질문지법은 대량·비교에 강하지만 문맹·오해에 약하다. 심층 자료와 주관 개입 가능성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의 공통점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A국가의 인구 부양비 및 고령화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 표이다. 이를 분석하고 추론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자료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분 \ 연도	1970	2010	2050
총부양비(%)	84	37	89
유소년 부양비(%)	78	22	18
노년 부양비(%)	6	15	71
고령화 지수(%)	7	68	377

<인구 부양비 및 고령화 지수 계산식>

1) 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0\sim15\text{세 미만})\text{인구수} + \text{노년}(65\text{세 이상})\text{인구수}}{\text{경제활동인구}(15\text{세 이상}\sim65\text{세 미만})\text{인구수}} \times 100$

2)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0\sim15\text{세 미만})\text{인구수}}{\text{경제활동인구}(15\text{세 이상}\sim65\text{세 미만})\text{인구수}} \times 100$

3)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65\text{세 이상})\text{인구수}}{\text{경제활동인구}(15\text{세 이상}\sim65\text{세 미만})\text{인구수}} \times 100$

4) 고령화 지수 = $\frac{\text{노년}(65\text{세 이상})\text{인구수}}{\text{유소년}(0\sim15\text{세 미만})\text{인구수}} \times 100$

* 부양 인구(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65세 미만 인구
* 피부양 인구 : 0~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보기>

㉠ 2010년에는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적지만 2050년에는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많다.

㉡ 2050년 부양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1970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1970년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10분의 1 미만이지만 2010년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총부양비·유소년 부양비·노년 부양비·고령화 지수의 의미를 구분하고, 각 연도의 수치를 인구 집단 사이의 비율로 해석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총부양비는 부양 인구 100명당 피부양 인구 수를 뜻한다.
2.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는 각각 부양 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수를 뜻한다.
3. 고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 수를 뜻하므로, 두 인구의 크기를 직접 비교할 때 사용한다.

핵심 근거

2010년 총부양비는 37, 2050년 총부양비는 89이므로 두 해 모두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적다. 유소년 부양비는 1970년 78에서 2050년 18로 크게 낮아진다. 고령화 지수는 1970년 7, 2010년 68이므로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각각 7%, 68%이다. 따라서 ㉡과 ㉢이 옳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의 '2050년에는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많다'가 틀렸다. 2050년 총부양비 89는 부양 인구 100명당 피부양 인구가 89명이라는 뜻이므로 피부양 인구가 더 적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② O — ㉡㉢은 모두 옳다. 유소년 부양비는 78에서 18로 급격히 감소하므로 저출산 문제를 유추할 수 있고, 고령화 지수 7과 68은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각각 10분의 1 미만과 3분의 2 이상임을 나타낸다.
③ X — ㉠㉢은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은 옳지만 ㉠이 틀렸고, 옳은 ㉡이 빠져 있다. ㉠은 '2050년에도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적다'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④ X — ㉠㉡㉢은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과 ㉢은 옳지만 ㉠이 틀렸다. 2050년 총부양비는 100보다 작은 89이므로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적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오답 포인트

총부양비 89를 피부양 인구가 89% 더 많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총부양비는 부양 인구를 100으로 놓은 비율이므로, 값이 100보다 작으면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적다. 또한 ㉢은 노년 부양비가 아니라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직접 비교하는 고령화 지수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지표의 분모와 분자를 확인한다. 총부양비는 100을 기준으로 피부양 인구와 부양 인구의 대소를 판단하고,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직접 비교는 고령화 지수를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총부양비 100은 피부양 인구와 부양 인구가 같은 경계이고, 고령화 지수는 노년 인구를 유소년 인구와 비교한 값이다.

NoteBase

문 16.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개인은 독자적인 판단이나 사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반영하여 행동하며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회 구조를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의 한계를 정하고 구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③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뿐이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특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이다. 즉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이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서로 반대로 설명한다는 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을 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사회의 독립성, 사회 구조, 개인에 대한 구속이다.
사회 명목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개인의 자유 의지, 개인의 특성, 개인으로의 환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개인의 행동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② O.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핵심 주장이다.
③ O. 사회보다 자유 의지를 지닌 개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사회·문화 현상을 개인의 특성에서 설명한다는 내용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적인 실체이다'이다. 이는 사회 실재론의 설명이며,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를 독립적 실체로 보지 않고 개인들의 속성과 행위로 환원하여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사회 명목론'이라는 이름 뒤에 사회 실재론의 핵심 내용인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적인 실체'를 붙여 두 관점의 속성을 바꾸어 놓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가 개인과 별개의 독립적 실체이고 개인을 구속한다면 사회 실재론, 사회 현상을 개인의 의지·속성·행위로 설명한다면 사회 명목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재론은 '사회가 실재하여 개인을 제약', 명목론은 '개인만 실재하고 사회는 명목'이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다양한 문화의 속성 중 일부의 사례를 설명한 글이다. (가), (나), (다)의 문화적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김치는 구전을 통해 혹은 음식과 관련한 문헌 등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하게 계승되었다. 이 과정에서 배추김치는 한국인 대다수가 즐겨 먹는 김치가 되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이다.
(나)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에 송편을,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풍습이 존재한다.
(다) 중앙아시아 유목민은 대체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러한 음식 문화는 물을 귀하게 여기는 건조 지역의 특성, 물을 많이 먹지 않는 가축을 선호하는 목축 형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돼지를 기피하는 태도,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는 종교적 규율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① (가): 학습성, (나): 축적성, (다): 변동성
② (가): 축적성, (나): 학습성, (다): 총체성
③ (가): 학습성, (나): 총체성, (다): 변동성
④ (가): 축적성, (나): 공유성, (다): 총체성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화의 축적성·공유성·총체성을 사례의 핵심 단서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축적성: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풍부해지는 속성이다. 키워드는 계승·발전이다.
공유성: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생활 양식과 의미를 함께 지니는 속성이다. 키워드는 구성원 다수의 공통 행동이다.
총체성: 문화의 여러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속성이다. 키워드는 환경·경제·종교 등 요소 간 연관이다.
학습성은 문화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속성이고, 변동성은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학습성, (나)를 축적성, (다)를 변동성으로 연결한 부분이 모두 잘못되었다. (가)는 구전과 문헌을 통해 계승되고 발전했다는 점에서 축적성, (나)는 사회 구성원들이 명절 음식 풍습을 공통으로 지닌다는 점에서 공유성, (다)는 자연환경·목축·태도·종교가 서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총체성이다. 올바른 연결은 '(가) 축적성, (나) 공유성, (다) 총체성'이다.
② X — (나)의 '학습성'과 (다)의 '총체성'은 잘못되었다. (나)는 명절 음식 풍습을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공유성이고, (다)는 여러 문화 요소가 연관된다는 총체성이다. 올바른 연결은 '(가) 축적성, (나) 공유성, (다) 총체성'이다.
③ X — (가)의 '학습성', (나)의 '총체성', (다)의 '변동성'이 잘못되었다. (가)는 세대 간 전승과 발전을 나타내는 축적성, (나)는 공통된 명절 풍습을 나타내는 공유성, (다)는 여러 요소의 상호 연관을 나타내는 총체성이다. 올바른 연결은 '(가) 축적성, (나) 공유성, (다) 총체성'이다.
④ O — (가)는 김치 문화가 전승되며 발전한 축적성, (나)는 명절 음식 풍습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니는 공유성, (다)는 자연환경·목축·태도·종교가 서로 연결된 총체성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가)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만 보고 변동성을 고르기 쉽지만, 구전과 문헌을 통한 계승에 새 내용이 더해져 발전했다는 전체 맥락은 축적성이다. (다)도 음식 문화가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자연환경·생업·태도·종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총체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워서 습득'은 학습성, '여러 구성원이 공통으로 향유'는 공유성, '세대 간 전승되며 내용이 더해짐'은 축적성, '시간에 따라 달라짐'은 변동성, '여러 문화 요소가 서로 연결됨'은 총체성으로 판단한다. 사례에 여러 단서가 있으면 지문이 강조한 인과관계와 변화 과정을 기준으로 가장 직접적인 속성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배우면 학습성, 함께하면 공유성, 쌓이면 축적성, 달라지면 변동성, 얽혀 있으면 총체성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태도 중에서 하나를 설명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외국 상품에 대한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선호
· 국악보다는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잘 알아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풍조

① 과거에 유럽 강대국이 식민지의 문화를 미개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문화를 식민지에 이식하려고 했던 행동과 유사하다.

②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자나 제도, 학문 등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며 숭상하고 모방했던 태도와 유사하다.

③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무시하면서 신사 참배나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한 것과 유사하다.

④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을 두어 행하는 종교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는 태도와 유사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국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를 자문화 중심주의 및 문화 상대주의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여 외래문화를 맹목적으로 동경하거나 모방하는 태도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이고, 문화 상대주의는 각 문화를 그 사회의 고유한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유럽 강대국이 식민지 문화를 '미개하다'고 평가하고 자기 문화를 이식하려 한 것은 자기 문화를 우월한 기준으로 삼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사례이다. 틀린 표현은 '식민지의 문화를 미개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문화를 식민지에 이식'한 부분이다. 문화 사대주의의 사례가 되려면 식민지 사람들이 유럽 강대국의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고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태도로 고쳐야 한다.

② O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자·제도·학문 등을 우월하다고 여기며 숭상하고 모방한 것은 외래문화를 높이고 자기 문화를 낮게 보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③ X
일제가 우리 고유문화를 무시하고 신사 참배와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한 것은 침략국이 자기 문화를 우월하게 여긴 자문화 중심주의이자 문화적 강요의 사례이다. 틀린 표현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무시하면서 … 강요'한 부분이다. 문화 사대주의의 사례가 되려면 우리 민족이 일본 문화를 우월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맹목적으로 추종한 태도로 고쳐야 한다.

④ X
라마단 의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틀린 표현은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문화 사대주의의 사례가 되려면 이슬람 문화 등 외래문화를 자기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태도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모두 한 집단이 자기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문화를 낮추거나 강요한 사례이다. 지문의 '외국 상품에 대한 맹목적 선호'와 '서양 문화를 알아야 교양이 있다'는 표현은 외래문화를 우월하게 보는 문화 사대주의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화 평가의 방향을 확인한다. 자기 문화를 높이고 타 문화를 낮추면 자문화 중심주의, 타 문화를 높이고 자기 문화를 낮추면 문화 사대주의, 각 문화의 고유한 맥락을 존중하면 문화 상대주의이다.

암기 포인트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것이 우월', 문화 사대주의는 '남의 것이 우월', 문화 상대주의는 '맥락에 따라 이해'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A는 사회 혁명으로 인해 평민이 되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하급 공무원이 된 후 성실하게 근무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다.
· 귀족의 딸로 태어난 B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많은 재산을 사치와 향락으로 탕진하고 범죄에 연루되어 노예 신분으로 강등되었다.

① 개인적 이동 - 수평 이동 - 세대 간 이동
② 구조적 이동 - 수직 이동 - 세대 간 이동
③ 개인적 이동 - 수직 이동 - 세대 내 이동
④ 구조적 이동 - 수평 이동 - 세대 내 이동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 이동을 이동 원인, 계층적 위치의 변화 여부, 이동이 일어난 세대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두 사례의 공통 유형을 찾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A는 사회 혁명으로 신분이 바뀐 뒤, 공무원 시험 합격과 자신의 근무·능력을 통해 하급 공무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상승하였다. 이 가운데 B와 공통되는 부분은 개인의 노력·능력에 따른 이동이다.
B는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범죄에 연루되어 귀족에서 노예로 강등되었다. 이는 개인의 행위에 따른 하강 이동이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생애 안에서 서로 다른 높이의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였다.

핵심 개념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노력, 능력, 선택이나 행위 등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구조적 이동은 혁명, 산업 구조 변화 등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 때문에 다수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수직 이동은 계층적 위치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이고, 수평 이동은 계층적 높이는 그대로인 채 직업·지역 등이 바뀌는 것이다.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의 생애 안에서 지위가 변하는 것이고,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지위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이동이다.

NoteBase

적용 기준

두 사례의 공통점만 추려야 한다. A의 공무원 승진은 개인적 상승 이동이고 B의 신분 강등은 개인적 하강 이동이므로 방향은 달라도 둘 다 개인적·수직·세대 내 이동이다. A가 혁명으로 노비에서 평민이 된 부분은 구조적 이동이지만 B에게는 없는 특징이므로 공통 유형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수평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이 틀렸다. 두 사람은 계층적 높이가 달라졌고 그 변화가 각자의 생애 안에서 일어났으므로, 올바르게는 '개인적 이동 - 수직 이동 - 세대 내 이동'이다.
② X — '구조적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이 틀렸다. A의 혁명에 따른 신분 변화만 구조적 이동이며 B의 강등과 공통되지 않는다. 공통 유형은 '개인적 이동 - 수직 이동 - 세대 내 이동'이다.
③ O — A는 자신의 시험 합격과 능력으로 상위 직위에 올랐고, B는 자신의 행위로 신분이 낮아졌다. 두 사례 모두 개인적 요인에 따른 수직 이동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일어났다.
④ X — '구조적 이동'과 '수평 이동'이 틀렸다. 두 사례에 공통되는 원인은 개인적 요인이고 계층적 높이가 변했으므로, 올바르게는 '개인적 이동 - 수직 이동 - 세대 내 이동'이다.

오답 포인트

A의 첫 변화에 '사회 혁명'이 제시되어 있어 구조적 이동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A와 B의 공통점을 묻는다. A에게 구조적 이동이 일부 나타나더라도 B의 강등 원인은 개인의 행위이므로 공통 분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상승과 하강은 모두 계층적 높이가 변하는 수직 이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인이 개인인지 사회 구조인지, 다음으로 계층적 높이가 변했는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생애 안의 변화인지 부모·자녀 사이의 변화인지 차례로 판단한다. 복수 사례의 공통 유형을 물으면 일부 사례에만 있는 특징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개인 원인 = 개인적, 계층 높이 변화 = 수직, 한 사람의 생애 안 = 세대 내 이동이다.

NoteBase

문 20. 사회 복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보험으로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 고용 보험 제도, 기초 연금 제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등이 있다.

②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며 재활, 돌봄, 역량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③ 사회 보험은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며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④ 공공 부조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유층의 소득을 빈곤층에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 보장의 주요 유형인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대상·재원·지원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 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가입이 강제된다.
공공 부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역량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은 사회 보험은 보험료와 위험 분담, 공공 부조는 조세와 선별 지원, 사회 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고용 보험, 국민 건강 보험은 사회 보험이지만 기초 연금은 사회 보험이 아니라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사회 보험으로는 … 기초 연금 제도 … 등이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기초 연금 제도를 공공 부조의 사례로 분류해야 한다.
② O — 사회 서비스는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재활, 돌봄, 역량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③ O — 사회 보험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소득 등 부담 능력을 반영하여 정해진다. 또한 법정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성이 있다.
④ O —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가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연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기초 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보험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기초로 하는 사회 보험이지만, 기초 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공 부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도의 명칭보다 재원과 급여 조건을 확인한다. 보험료 납부와 위험 분담이 중심이면 사회 보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 지원하면 공공 부조, 돌봄·재활·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회 서비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 보험은 보험료, 공공 부조는 조세, 사회 서비스는 돌봄·재활 등의 서비스이다. 기초 연금은 공공 부조, 국민연금은 사회 보험이다.

NoteBase